

독자권익위원 칼럼

박봉순

동신대학교 지역협력본부장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허니문데이 라고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는 시간이 있다.

A회사와 B회사가 합병을 해도 서로의 문화와 특성을 알아가는데는 상당기간이 필요해 보통 6개월 정도를 허니문 기간이라 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지내지 않는다.

광주와 전남이 분리 된 지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통합이라는 단어로 다시 만났다. 40여년이 지났으니 속된 말로 강간이 변해도 4번은 변했을 것이다. 물리적, 정치적으로 분리되면서 각자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서 등지를 틀었다.

광주는 상무대를 이전해 그 자리에 인구 10만명 규모의 자족 신도시를 만들었고, 전남은 무안 삼향읍에 인구 5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만들었다. 분리 전에는 광주가 전남에 속해있어도청이 광주에 있게 됨에 따라 경찰청, 교육청등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에 속해 있는 민간기업 법인들도 광주에 있었고, 이 단체들이 2개로 분리돼 남악으로 이전하는 상황이 됐다.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각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세월은 무시를 하지 못하겠지만 호남의 한뿌리가 2개로 분리

허니문 기간

돼 사회적 이슈나 경제의 배분에서 광주와 전남이 서로의 임정만 내세우면서 갈등과 사회적 비용, 주민들의 지역주의 팽배가 지역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됐다.

공황이전, 쓰레기처리, 공동유치, 물 관리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합의를 찾지 못해 제자리를 땀독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변과 갈등은 금액으로 환산하기도 힘들 것이다.

진작에 하나로 다시 통합됐다면 해외여행을 가면서 4시간씩 인천 공항으로 올라 가야하는 번거로움은 해소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광주와 전남이 한 뿌리가기는 하지만 거의 반세기 만에 다시 합쳐졌으니 서로의 다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반도체가 주력산업이 되고, AI가 생활 깊숙이 들어와 기계와 사람이 공존하는 시대가 왔다. 새로운 대도약의 시대가 바로 앞에 왔음을 모두가 직시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옛날 사고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만이 잘 살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통합의 가치를 더디게 한다면 통합의 시기는 멈춰서 움직이지를 않을 것이다. 물론 통합의 절차나 방식이 잘 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사회 공론화와 속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군공항 이전이나 의대 설립 등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여론 검증의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결국 이번 통합도 이슈가 정치의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모습으로 탄생하다 보니 출발점부터 빼그덕 거리고 시간만 흘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하지만 회사간의 합병이나 정치적 연합, 정당간의 협력도 처음에는 기존 우리것에 대한 업무방식과 가치, 성격

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융화가 되질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믿어보고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해 주는, 쉽게 말해서 내 것을 나타내지 않고 남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 주는 기간이 필요 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을 한다.

즉, 새로운 관계나 결합이 시작된 직후, 서로의 차이와 갈등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협력적으로 지내는 초기 단계로 문제가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갈등을 수면 위로 크게 끌어 올리지 않는 시기인 것이다. 초기에 기득권을 잡아야 한다면서 생떼를 부리거나 지역의 조그마한 사항도 지역 주민들을 부추겨 여론몰이전을 하는 모습들이 혹여나 전남광주의 대도와 시기에 찬물을 끼얹저 통합의 취지가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통합의 민선시장이 중앙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20조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기업, 공공기관들이 이전 해와 통합 특별시의 혜택이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온전히 가기를 바랄 뿐이다. 벌써부터 '통합 이전이 좋았다',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성급함과 이기적 사고가 지역 발전을 그르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6개월의 '허니문 기간' 동안 좋은 의견도 제시하고, 서로가 하나되는 방안도 마련해 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 전남광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성공한 통합특별시가 됐다는 자부심과 기쁨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고

안형주

하이트경제정책연구소장
전 광주특별시 서구의원

지난 7월 1일, 인구 316만명, 예산 40조 4000억원,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의 메타드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마침내 출범했다.

이와 동시에 국토교통부는 광주 군 공항 일대 8개 시·군·군 224개 동·리에 걸친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묶었다.

여의도 면적의 약 86%에 이르는 248만평의 거대 유휴부지, 즉 광주 군 공항과 서구 마북동 탄약고 일대가 하루 아침에 '개발 폭발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방대한 부지 위에 무려 896조원(삼성전자 425조, SK하이닉스 470조, 엔코 등 1조)이 투입되는 '호남권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청사진을 확정했다.

직접고용 3만명, 연관 산업 고용 10만명, 1GW급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해마다 약 1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지역의 뼈아픈 현실 속에서 13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수도권 일국주의를 막아낼 가장 강력한 확실한 '인구 담'이다. 이 거시적인 방향성과 구도 자체는 백번 옳다.

하지만 눈부신 빛만큼 그림자도 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생 경제 거버넌스 필요하다

발표 직후 상반기 광주 군 공항 인근 토지거래 19건 중 12건이 전형적인 투기 형태인 '자본 쪼개기'가 이뤄졌고, 인근 노후 아파트들은 '상생발전구역'으로 의무 지정해야 한다.

군 공항 이전과 탄약고 해제로 수십 년간 묶였던 고도제한, 용도 지역, 접근통제 규제가 일시에 풀리면서 인접 토지 소유자는 본인의 땅과 노력과는 무관한 막대한 '우발적 개발이익'을 거두게 됐다.

현재 발동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거래를 사전 차단할 뿐, 폭발하는 거대가치의 형평성을 맞추거나 차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데는 손을 못 대고 있다.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의 위협은 더 심각하다. 필자가 한국부동산원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 광역 인프라 확충이 가시화된 직후 상무역 일대 상업용 임대료는 타 상권 대비 11.4%p 추가 급등하는 뚜렷한 '자본화(Capitalization)' 현상을 보였다.

상권이 활성화되기도 전에 임대료 압박을 견디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과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된 것이다.

상가가 텅 비어도 호재는 비지 않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영세 상인들이 쫓겨난 반도체 클러스터는 결국 거대 자본의 외형적 독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시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궤를 같이해, 미시적인 소상공인 상생 대책이 행정의 최우선 순위로 다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상권 및 주요 교통 결절점을 선제적인 '상생발전구역'으로 의무 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대료 인상물의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장기안심상가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취득세 감면 등 과감한 지방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 상생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군사 유휴부지 개발에는 반드시 '우발적 이익 환수(Land Value Capture)' 조례가 뒷받침돼야 한다.

통합특별시 의회는 인접 민간 부동산 소유주들이 얻게 되는 막대한 지가 상승 프리미엄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금이나 기반시설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시스템을 조례로 명문화해야 한다.

나아가 이렇게 환수된 공공 재원은 앞서 언급한 동지내 물림 방지 기금과 낙후된 원도심 주거재생 재원으로 100% 순환 투입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과거 서구의원으로서 현장을 누비며 얻은 확고한 결론은, 거대한 인프라 투자의 화려한 과실이 소상공인과 평범한 시민의 지갑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정책은 정당성을 잃는다는 것이다.

새롭게 빛을 올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89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 유치의 쾌거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교하고 따뜻한 '상생의 경제 거버넌스'를 실현한 역사적 성공 모델로 기록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독자투고

‘착!한 운전’ 캠페인에 동참 당부

매일 아침 출근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가 있다. 바로 남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이다. 사고 집계표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지곤 한다. 안타까운 사고의 사망수가 법규 위반이 아닌 작은 방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요한 제도 변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범칙금(승용차 기준 3만원)만 부과된 방향지시등 미점 등, 좌석 안전띠 및 안전모 미착용 항목에 대해 '벌점 10점'이 추가로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은 우선 8월과 9월 두 달간을 계도와 홍보 기간으로 먼저 지정에 주민 여러분께서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스스로 올바른 운전 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착!한 운전' 캠페인을 펼치고,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기 전에는 안전띠, 차선변경 전 살짝 우리는 방향지시등은 바운도 시간도 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나와 내 가족, 동네 이웃의 교통안전을 위해 '착!한 운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허희진 광주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사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타 면제 적극 환영

800조원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인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할 용수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가 면제됐다. 적극 환영할 일이다.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을 적기에 확충해 산단 조성의 속도를 높ی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2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 들어설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관련 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통과됐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의 행정통합 재정을 투입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과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맞춤형 반도체 산업 지원을 할 '마중물' 성격의 재원을 확보한 셈이다. 다만 출연사업의 근거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예타를 조건부 면제했다.

호남권 반도체 펌 4기에 들어가는 용수는 하루 65만t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한 동북대 증교 확장공사와 광역상수도 연결관로 신설·확충 등 총 3조600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여기에서 반도체 산단의 용수공급으로 농업용수 부족을 방지하지 위한 대책으로 나주호 수해구역 말단부 농경지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의 예타 면제안도 통과했다. 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농업·공업용수 간 갈등을 기반시설 구축 단계부터 줄이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전력과 용수 인프라 관련 사업이 예타 면제로 필요한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호남권 반도체 산단계획 수립과 설계, 인허가, 기반시설 공사를 펌 건설 일정에 빨라지게 됐다.

펌 가동에 필요한 전력 6.3GW 인프라 확충 등 세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예타 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력과 용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대통령이 공언한 호남반도체 펌 조기 착공을 위한 '전격전' 구상이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회도 '국가대계'로 추진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발맞춰 특별법 조기 개정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때다.

1032개 명소, 이제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관광 경쟁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대표 명소 100×100' 프로젝트에서 전남광주 지역 명소 1032곳이 선정됐다. 전국 사·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과 담양 죽녹원, 순천만습지,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루수길 등 4곳은 국민투표 종합특표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숫자만 놓고 보면 관광자원은 차고 넘친다. 문제는 이 많은 자원이 하나의 관광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는 것이다. 좋은 관광지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역에 오래 머무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이 '여기까지 왔으니 다음에는 어디를 갈까'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역과 지역을 잇는 관광 동선과 콘텐츠가 필요하다.

광주의 문화예술과 근대역사문화, 담양의 정원과 숲, 순천의 생태관광, 여수의 해양관광, 남도의 음식문화 등은 각각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여행으로 묶어야 비로소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이런 점에서 관광정책의 틀을 바꿀 기회다. 광주와 전남의 관광자원을 따로 홍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광역관광권으로 묶어야 한다. 지자체별로 축제와 관광지를 경쟁적으로 홍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공동 브랜드와 통합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령 광주에서 역사·문화관광을 즐긴 뒤 담양의 정원과 순천의 생태관광을 거쳐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남도의 음식과 축제, 전문문화까지 결합한다면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며칠씩 머무는 여행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계절별로 다른 관광자원을 묶는다면 특정 지역이나 시기에 관광객이 몰리는 문제로 완화할 수 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잡아 두는 것이다. 명소 하나를 보고 떠나는 관광에서 여러 지역을 연결해 체류하는 관광으로 바뀌어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지 간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광역 교통망과 관광 셔틀, 숙박시설 확충, 지역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의 연계도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관광정책의 주체부터 달라져야 한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처럼 각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관광재 유지에만 집중한다면 통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관광객에게는 행정구역의 경계가 중요하지 않다. 여행하기 편하고 볼거리가 많으며 오래 머물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장 정 영민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산업경제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광3)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